OPINION

2025년 7월 1일 화요일

특별기고

현장서 시작된 혁신, 미래를 여는 광주교육

이심
재단법인 빛고을어울림장학회 설립자

광주교육은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한 혁신을 겪고 있다. 직선 4기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정책은 더 이상 구호나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수업, 학력, 공간, 진로, 국제화 등 교육의 핵심 축에서 보여준 변화는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신뢰 회복의 희망 신호로 읽힌다.

수업성장인증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교사 스스로 수업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 시스템은 교사들 사이에 '내 수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퍼뜨렸다. 단지 연수 이수의 수단이 아니라, 동료와의 피드백을 통해 전문성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은 교사 중심의 수업 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향후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와 연계된 정책적 제도화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광주는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학습 미도달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위권 이하 학생군의 학업 유지율이 개선되었으며, 개별 진단-맞춤 수업-정서 지원이라는 삼중 구조가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향후에는 정서·행동 지원과 결합한 통합 학습안전망으로 확장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부할 공간'의 개념을 바꾼 것은 '365-스터디룸'과 'AI 학습 공간'이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공간을 주는 것을 넘어, 자기주도학습과 멘토링이 결합된 열린 교실은 지역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공교육 공간의 야간 개방과 지역사회 협업은 앞으로 더욱 넓혀야 할 과제이며, 청소년 주도 운영 모델을 실험해볼 시점이기도 하다.

진로·진학 24시 상담 시스템은 정책 혁신 그 자체였다. 단일 플랫폼에서 진로, 진학, 심리, 생활지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상담체계는 광주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에는 진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상담 및 부모-교사 연계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상담의 깊이와 지속성에서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 한바퀴' 프로젝트는 그 상징적인 모델로, 단순한 연수가 아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게 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향후 참가자의 학교 내 실천 활동과 지역사회 환류 구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중학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이해교육의 연령대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한마디로 광주의 변화는 정책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낸 아이들의 변화된 표정에서 확인된다. 수업에 몰입하는 눈빛, 진로를 말하는 목소리,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태도 속에 '광주다운 교육'의 가능성이 보인다.

광주교육 정책은 단기 성과가 아닌 미래를 향한 구조 개혁이라는 데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현장의 참여를 기점으로 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제도화, 그리고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 회복 위한 정책 간 통합적 연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대적 환경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과 한 때의 잘못 생각으로 거리에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한국 졸업장이 필요 다문화 가족들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스템도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받을 헌법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전국에 42개소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2년제 중·고등학교가 있다.

교육도시 광주에도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한 곳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정의 학습 분위기가 조부모, 부모, 어린이의 통합적 교육이 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있다.

우리는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의 미래를 바꾸는 것임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으 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 깊어지고 이어지기를 바란다.

기고

전남 경제 성장 선순환, '소득 유출 차단'서 출발

김문수
전남도의원(농수산위원장)

전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득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기업 소득 유출은 12조400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추정된 유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며, 이는 1인당 1066만원의 소득이 유출된 것이다.

이 수치는 전남도 총 지역 내 생산(GRDP)의 20%를 넘는 상당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남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투자되어야 지역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외지 본사를 둔 기업들이 도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후, 그 수익은 본사로 이전된다. 이로 인해 지역에는 경제적 공백만이 남는다.

또한 도내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당수의 인력들이 거주지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두고 있어, 급여의 대부분이 전남이 아닌 외부 지역에서 소비된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해 지역 내 유통망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 역시 장기적 소득 유출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다.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청년층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의 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다행히 전남도는 이러한 지역 소득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책을 시행해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과의 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역-기초 일자리 동행', '전남형 동행 일자리' 프로젝트,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외에도 전남도의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시장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지역 소득 유출, 특히 기업 소득 유출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 간 정책지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인 성과만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

전남도가 미래를 대비하고 장기적인 소득 유출 방지 정책을 고민한다면 '지역 경제 생태계 강화'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전략 산업 부문에 있어서 도내에 본사를 두고 지역민과 같이 성장할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표적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금, 보조금,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기업 중심의 교통망, 주거 단지 등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 사업체가 경쟁력 있는 급여, 복리 후생, 전문적인 이력 관리와 성장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전문 인력 육성과 정착을 위한 사업체-대학 및 직업 훈련 센터 등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소득 유출, 특히 기업 소득의 유출 문제는 정책적인 노력이 강력하게 뒷받침 되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기업 소득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전남이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된다는 것이며, 지역 소득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은 전남이 살기 좋은 도가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선순환의 시작은 이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취재수첩

쌓여가는 '빈집', 대책은

송대웅
경제부 차장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광주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19호로 전월 대비 70호 증가했다. 전남은 2351호로 13호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말 그대로 집을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태다. 단순한 공급과잉 문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의 구조적 위험 신호다.

건축이 완료됐음에도 비어있는 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고, 자금 회수 지연은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중소 건설사는 신규 착공을 꺼리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며 위험 회피에 나선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 세수 축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 주택을 사려던 소비자들도 '이 지역 시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며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 실제 광주의 도심 외곽, 전남은 인구감소 지역 중심으로 미분양이 집중되고 모양새다. 지역 선호도가 하락하고, 거주 여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젊은층 이탈과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등 일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양에서 질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고령자 전용주택,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공급도 더욱 필요하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존 수요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는 단순히 '집이 남아 있다'는 수치가 아니다. 그 숫자는 바로 지역의 인구, 경제, 미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이 경고등이 꺼지기 전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 모두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장마철 붕괴 유실지역 돌아봐야

올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태계 변화에 따라 게릴라성 폭우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주택가나 산을 깎아놓은 절개지는 지반이 약해 흙과 돌더미가 호우에 밀려 내리면서 주택이나 도로를 덮치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유실이나 붕괴의 위험이 도사린 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한 절개지와 경사지 유실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 호우성 게릴라 폭우 피해를 줄여나가고 최소화해야 한다. 자연 재해나 불행은 멀리 있지 않다.

항상 '기상이변은 돌발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상습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을 점검해 유지보수를 서둘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야 할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하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경무과 경감

사설

찜통 더위 기승…"야외활동 자제하세요"

광주·전남지역에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데 이어 29일에는 광주와 담양·곡성·구례·순천 등 4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발령나 30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는 점에서 4일째 땡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습도가 10% 오르면 체감온도는 1도 상승한다고 한다. 기상청은 이런 이유로 2023년부터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주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없이 이어지고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상청이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주에도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은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찜통더위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여기에 낮 시간 동안 강한 일사까지 더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남의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이송중 숨졌고 지난달 26일에는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보행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과 함께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신고 집계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명이나 된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온열질환자 45.9%가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8.9%는 낮 시간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조사됐다고 한다. 다시 말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광주시·전남도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과 시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눈에 띄네'

광주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눈에 띈다.

지난해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광주시가 지난 2008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1년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도입당시 광주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맺은 뒤 이 제도의 전신인 '탄소은행' 제도를 실시, 시행 초기부터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될 만큼 환경운동의 선진 사례로 주목 받았다.

환경부는 그 다음해인 2009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산해 운영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체 65만여세대 중 58%에 달하는 37만여세대가 여기에 가입해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2위인 제주 가입률이 35.61%, 3위인 전북이 23.09%라는 점에서 광주의 가입률은 가히 압도적이다.

전남(15.67%)은 경남(17.56%), 대전(15.88%)에 이어 전국 6위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세대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세대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한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특히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환경 보호와 인센티브 혜택의 일석이조 효과를 주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060
경제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원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